

기고

민주주의, 슈퍼마켓에서 길을 잃다



박원재 한국국학진흥원 수석연구위원

근래 헌법에 대한 일반인들의 관심이 부쩍 많아졌다. 민주주의의 위기에 대한 반작용이다. 헌법에서도 민주주의의 근본 전제인 주권재민과 그에 따른 대의정치 원칙을 천명한 제1조가 많이 언급된다는 사실이 이를 잘 말해 준다.

그런데 헌법에는 우리가 선택한 민주주의의 성격을 규정할 표현도 함께 들어 있다는 사실은 그리 주목받지 못하는 듯하다. 헌법 전문과 평화통일의 기초를 밝힌 제4조에 등장하는 ‘자유민주적’이라는 표현이다. 우리가 추구하는 민주주의는 다른 그 어떤 민주주의, 이를테면 사회민주주의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임을 천명한 부분이다.

우리가 선택한 민주주의의 성격을 제대로 성찰하기 위해서는 이 자유민주주의에서 말하는 ‘자유’의 의미와 역할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한다. 결론부터 말하면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가 가리키는 것은 서양 근대에 태동한 ‘자유주의’(Liberalism)가 지향하는 자유이다. 정리하자면

우리 헌법에 명시된 자유민주주의는 곧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결합체인 것이다.

그렇다면 자유민주주의의 성격을 이해하는 일은 다시 자유주의로 초점이 이동한다. 자유주의란 어떤 이념인가? 그것은 서양 근대에 일련의 혁명을 통해 왕정을 무너뜨리거나 무력화시킨 시민계급이 반대급부로 어디에도 침해받지 않을 자신들의 배타적인 권리를 획득해 가는 과정에서 등장한 정치적 이념이다.

이 점에서 자유주의가 추구하는 ‘자유’는 일차적으로 이 이념을 탄생시킨 주체인 서양 근대 시민계급의 자유를 가리킨다. 이차적 자유주의가 추구하는 자유는 출발점에서부터 모든 사람의 자유가 아니라 시민계급이라는 특정한 계층의 자유였다. 자유주의의 이러한 성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민주주의의 상징인 보통선거가 서양에서조차 전면적으로 시행된 것이 20세기에 들어와서, 심지어는 2차 대전 이후에 와서라는 사실을 환기시키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자유주의자들의 눈에 민주주의는 늘 불순한 그 무엇이었다. 그것은 다수결 혹은 민의(民議)라는 이름으로 개인의 자유를 제한할 위협을 지닌 제도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미국 독립혁명과 프랑스 대혁명 이후 민주주의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추세였다. 특히 신생국 미국의 민주주의는 이 제도가 앞으로 어떻게 가지를 뻗어 무성해질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

례였다. 자신들의 호오와 관계없이 상황이 이렇게 전개되자 자유주의자들은 차선책을 택한다. 민주주의와 손을 잡되, 그것을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변용시키는 방법이다. 곧 대의민주주의의 불가피성에 대한 강조이다.

직접민주주의가 불가능한 이유로 보통 국가 조직의 비대화와 교통·통신 등 제반 사회 기반시설의 미비 그리고 그로부터 야기되는 ‘비효율성’ 등이 주로 거론된다. 그러나 민주주의의 역사를 들여다보면 거기엔 좀 더 은밀한 이유가 자리 잡고 있다. 민주주의는 곧 평등이라고 생각하는 ‘무식한’ 대중들로부터 자신들의 기득권을 침해받지 않으려는 자유주의자들의 방어 노력이다.

대의민주주의는 이런 고민을 해결해 준다. 대의민주주의 체제에서 대중의 정치적 의사를 대표하는 이른바 민의의 대변인들은 사회적으로 우월한 위치에 있는 자신들 속에서 나올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절차적 민주주의가 마치 민주주의의 알파로 오메가인 양 선전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것은 모든 국민이 정치적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한다는 것은 원론적으로 불가능하므로 그것은 선거를 통해 뽑힌 대표들에게 맡기고, 나머지 사람은 그들을 뽑는 절차의 공정성에만 관심을 쏟으면 된다는 생각에 기반을 둔다.

여기서 ‘정치’가 개인이 공동체의 구성

원으로 성숙해 가는 데 필수적인 요소라는, 민주주의의 본래 모습인 참여민주주의의 취지는 쓰러져기로 던져진다. 그리고 이것을 끼꺼이 받아들인 주권자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 ‘정당’이라는 업체가 ‘선거판’이라는 슈퍼마켓에 주기적으로 공급하는 상품의 소비자로 전락한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그나마 이것마저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데 있다. 소비자인 주권자는 상품의 설명서나 제원을 꼼꼼히 들여다보고 물건을 사는 것이 아니라 디자인이나 광고 모델과 같은 부차적 부분에 현혹되어 구매를 결정한다. 상품 자체의 사용가치가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지가 모든 것을 지배하는 이런 풍토 속에서 제대로 된 상품이 구매했 리 만무하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부딪치고 있는 집단적인 자괴감과 상실감의 근본적인 원인이다.

우리의 민주주의는 지금, 예전 어느 텔레비전 드라마의 제목처럼, 슈퍼마켓에서 길을 잃었다. 상인들의 모리배 풍토도 문제지만, 그들의 농간에 춤을 추는 현명하지 못한 소비자들이 그것을 더 조장하고 있음을 불만타더라도 인정해야 한다. 상품설명서의 깨알 글씨는 물론이고 상인들의 창고 구석구석까지 카메라를 들이대는 ‘소비자 리포터’의 존재가 절실한 때다. 불량 상품을 배송받고 할 수 있는 게, 할 줄 아는 게 분노밖에 없어서는 상인들의 상술에 놀아나는 일이 되풀이될 뿐이다.

법조칼럼

아이들에게 희망을



임일수 광주지검 검사

검사실에 오는 사람들은 대부분 상처 입은 사람들이다. 고소인이든 피의자든 사정을 듣다보면 때로 안쓰럽기도 하고 처벌을 해야 하지만 마음이 편치 않을 때도 있다.

그 중 가장 마음이 아플 때는 어린 청소년들이 범죄를 저질러 검사실을 방문했을 때이다. 대부분 아이들은 검사실에서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쓴 다음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사건이 종결되지만 때로는 수의를 입고 포승줄에 매인 아이들을 조사할 때도 있어 마음이 더욱 좋지 않다.

한 아이가 가혹을 하였다가 절도로 입건되어 검사실에 왔길래, 왜 가혹을 하였느냐고 하니 ‘아빠가 때려서요’라고 하여 순간 말문이 막혔다. 이런 아이들에게 검사의 훈계가 무슨 소용이 있을까, 다시 집으로 돌아가면 상황이 바뀔까? 이들에게는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고,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지만, 정신없이 생활하다 보면 따뜻한 격려 한마디를 건네는 것도 쉽지 않다.

국가에서는 보호관찰소, 범무보호복지공단 등 기관을 통해 아이들에게 보다 적절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국가의 힘만으로 우리 아이들을 유해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국가는 조직체로서 일정한 예산과 규정, 규칙들에 매여 있어 아이들의 다양한 상황에 수시로 대응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고, 결국 소년들에 대한 시민들의 지지와 사랑, 적응을 돕기 위한 노력들이 수반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법무부에서는 일반 시민들 중 청소년선도 등 범죄예방 자원봉사에 관심이 많고 타의 모범이 되는 분들을 범사량위원으로 위촉하여 소년범들의 멘토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검사는 일정한 경우 범사량위원에게 선도 받는 것을 조건으로 소년범에 대해 기소유예처분을 한다. 그러면 소년범들에 대한 형사사건은 검찰단계에서 바로 종결이 되고 범사량위원들은 정기적으로 이들을 만나면서 상담 및 지도활동을 한다.

이 제도는 바로 광주에서 시작되었다. 광주지방검찰청은 1978년 전국에서 최초로 소년범에 대하여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를 실시하였고, 이를 계기로 1981년 법무부 훈령에 의해 전국적으로 범사량위원(당시 범죄예방위원)연합회가 조직되고 지금까지 이르고 있다.

소년선도에서 시작한 범사량위원들의 활동은 현재는 보호관찰대상자와 형집행

을 마치고 출소한 성인들의 자립과 사회복귀를 위해 거처와 일자리를 지원하는 데까지 이르고 있다. 광주에서는 현재 760여명의 범사량위원들이 헌신적으로 활동하고 있어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

사실 검사들도 범사량위원들의 활동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필자는 서울과 이곳 광주에서 범사량 관련 업무를 처리하면서 많은 범사량위원들을 만나고 그 활동을 옆에서 지켜볼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대부분의 범사량위원들은 소년선도에 대한 열정과 범사량위원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활동하고 있어 검사인 나도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였다.

예전하 검사실에는 거의 매일 어린 청소년들이 방문하여 서약서를 쓰고 조사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이들을 응원하고 지지하고자 하는 따뜻한 마음을 지닌 분들이 많다는 생각에 조금은 안심하고 희망의 눈빛으로 아이들을 바라보게 된다.

기고

법 논리로 우기는 것은 비겁하다



양성관 동강대 노인복지학과 교수

나는 TV를 즐겨보지 않는 편이며, 라디오나 신문, 휴대전화에서 뉴스를 주로 접하는 편이다. 특히 TV에서는 드라마를 잘 보려하지 않는다. 어쩌다 드라마를 보게 되어, 드라마에 빠지게 되면 귀한 시간을 드라마에 낭비하게 되기 쉽기 때문이다.

그런데 요즘은 아침에는 라디오에, 저녁에는 TV 앞에 빠져있다. 오늘도 집에 들어와서 걸을 벗지도 않은 채, 소파에 앉아 TV 리모컨을 가지고 요즘 최고의 인기 드라마 ‘최순실’을 찾아 또 다른 새로운 사실에 놀라곤 한다. 매일 저녁마다 새로운 사실을 나를 꼼짝 못하게 TV 앞에 묶어놓고, 잠을 자고나면 아침에 또다

시 새로운 사실로 나를 경악하게 하는 ‘최순실’ 관련 뉴스야말로 최고의 인기 드라마가 된 것 같다. 대한민국 국민을 온통 경악과 분노로 들끓게 한 인기 드라마 ‘최순실’의 인기는 언제나 끝이 날지?

이 시점에서 친한 고등학교 친구가 생각한다. 그 친구는 서울에서 변호사 생활을 하다가 몇 년 전 광주지방법원 판사로 온 적이 있다. 주말이 되면 그 친구와 나는 테니스를 했다. 변호사 시절에는 골프를 쳤지만 판사로 와서는 골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유는 본인이 골프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변호사 등 여러 형태의 접대골프가 유혹할 것이라고 했다. 테니스가 끝나 후, 이 친구는 가끔 맥주를 한 잔씩 마신다. 맥주를 한 잔만 마셔도 반드시 대리운전을 불러서 가곤 했다. 어느 날 내가 “집도 가깝고 맥주 한두 잔 마신 것 같은데, 차를 가지고 가면 안 되느냐?”고 물은 적이 있다. 그때 이 친구는 “판사기법을 어기면 이 나라가 무슨 꼴이 되겠냐?”고 분명한 어조로 얘기했다.

또 한 지인은 구(區)의원이다. 나와 식

가는데, 식당에 들어서면서 주인에게 “아까 예약한 ○○의원입니다.”라고 했다. 굳이 예약을 하지 않아도 자리가 많은 식당이고, 예약석이 따로 있는 곳도 아닌 작은 식당인데 사전에 의원 신분으로 예약을 한 것 같다. 구의원만 되어도 목에 힘줄을 주고 다니니, 대한민국의 시의원, 국회 의원들은 얼마나 목에 힘을 주고 다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대한민국은 참 살기 좋은 나라이다. 필자는 몇 년 전에 1년 정도 해외에 교환교수로 나갔다가 온 적이 있다. 해외에 있는 동안 내내 우리나라의 뚜렷한 4계절, 편리한 교통, 안전한 치안 등이 그러했다. 그러면서 생각한 것은 대한민국이 딱 한 가지, 정치인만 바꾸면 정말 좋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었다. 해외에 있으니 뉴스에서 정치인들의 싸우는 모습을 안 보니, 내려놓는 것이야말로 잡는 것이고,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성실하게 열심히 공부하면 원하는 대학에 들어갈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는 대한민국임을 대한민국 국민에게 알려주는 겸손하고 진실한 대통령의 마지막을 국민은 바란다.

있다. 여기에는 두 여자 주인공과 수많은 조연 정치인들이 등장한다. 주연은 주연답게 매일 새롭고 놀라운 사건으로 인기를 끌며 자신의 인기를 유지하려고 갖은 핑계와 잔머리를 굴리는 것 같고, 조연들은 주인공을 편드는 쪽과 주인공을 끌어내리려는 쪽으로 나뉘어져 있다. 매일 매일 새로운 사실로 국민들의 마음을 아찔하게 하는 ‘최순실’ 드라마는 하루빨리 끝나야 한다. 우리 국민은 추운 날씨에 옷을 입고 분노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국민 각자가 맡은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고 싶다.

100만 개의 촛불은 냉엄한 소리로 외치고 있다. 가진 자가 법의 논리로 우기는 것처럼 비겁한 것은 없다. 법 이전에 도덕성과 책임이 앞서야 한다. 시간을 끌며 또 다른 꼼수로 자리를 지킬 수 없는 것이다. 내려놓는 것이야말로 잡는 것이고,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성실하게 열심히 공부하면 원하는 대학에 들어갈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는 대한민국임을 대한민국 국민에게 알려주는 겸손하고 진실한 대통령의 마지막을 국민은 바란다.

社說

‘피의자 박근혜’ 대한민국 이끌 수 있겠나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됐다. 헌정 사상 현직 대통령이 입건된 것은 처음이다. 검찰은 최순실 씨(60)의 국정 농단 사건과 관련한 공소장에 ‘대통령과 공모하여’라는 부분을 적시하며 박 대통령을 미르·K스포츠재단의 출연금 강제 모금과 국정자료 유출 혐의에 대한 ‘공범’으로 결론 내렸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최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57),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47)을 어제 구속기소하면서 이들이 박 대통령과 공모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직접적으로 언급했다. 박 대통령을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한 피의자로 정식 입건한 검찰이 앞으로 박 대통령을 강제수사할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검찰은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기업의 자금 출연을 강요했다는 혐의, 최 씨 관련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도록 현대자동차그룹에 강요했다는 혐의, 한 국관광공사 산하 공기기업인 그랜드레저 코리아에 장애인 펜싱팀을 창단하도록 하면서 에이전트 계약 등을 최 씨 실소유 회사와 체결하도록 강요했다는 혐의 등에 모두 박 대통령의 개입이 있었

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또한 내사를 받고 있던 롯데그룹으로부터 70억 원을 정 사상 현직 대통령이 입건된 것은 처음이다. 검찰은 최순실 씨(60)의 국정 농단 사건과 관련한 공소장에 ‘대통령과 공모하여’라는 부분을 적시하며 박 대통령을 미르·K스포츠재단의 출연금 강제 모금과 국정자료 유출 혐의에 대한 ‘공범’으로 결론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공소장에 기재된 내용이 100%라고 말은 못하지만 99%는 입증 가능한 부분을 적시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번 중간수사 결과 발표에서 이들에게 ‘뇌물죄’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유감이다.

어찌 됐든 야당의 주장이 아니더라도 ‘피의자 신분의 대통령’에게 대한민국을 맡길 수는 없는 일이다. 박 대통령은 몇 차례의 촛불 집회에서 나타난 민심을 받아들여 나라를 더 큰 혼란에 빠뜨리지 말고, 스스로 물러나는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

‘탄핵사유 충분’ 야권 잠룡들도 한목소리

어제 검찰의 중간수사 결과 발표 직후 야권 대선 주자들도 일제히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주장하고 나섰다. 김부겸 민주당 의원과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 박원순 서울시장, 심상정 정의당 대표,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 안희정 충남지사, 이재명 성남시장 등은 이날 정국수습 방안 마련을 위한 ‘비상국회 정치회의’를 갖고 탄핵 추진과 박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를 촉구하기도 했다.

문재인 전대표는 “검찰 수사 결과 발표로 법적으로 탄핵 사유가 충분하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말했으며 안철수 전 대표는 즉각적인 탄핵 추진을 강조 했다. 김부겸 의원 역시 “사실상 탄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하루빨리 책임 총리가 운영하는 거국내각이 자리를 잡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원

순 시장도 “대통령의 퇴진을 이뤄내 새 역사를 써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스스로 물러날 생각이 전혀 없는 듯하다. 민심을 외면한 채 오히려 강한 국정 운영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22일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게다가 청와대는 앞으로 검찰 조사에 일절 응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러나 국민들의 분노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박 대통령은 지난 주말 전국적으로 100만 명이 모인 퇴진 전국 촛불집회 상황을 TV로 생중계 본 것으로 전해진다. 언제까지 민심을 외면할 것인가, 박 대통령은 모든 진실을 솔직하게 밝히고 국민 앞에 퇴진을 약속해야 할 것이다.

無 等 鼓

918년, 부하들에 의해 왕으로 추대된 왕건은 수하들 중 무예가 출중했던 신숭겸을 대장군으로 삼는다. 왕건은 후지지도하고자 하는 따뜻한 마음을 지닌 분들이 많다는 생각에 조금은 안심하고 희망의 눈빛으로 아이들을 바라보게 된다.

대부분 전사했다. 진정한 호위 무사가 무엇인지를 보여 주는 대목이다.

20일 구속기소된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공소장에 따르면 최순실 국정 농단 의혹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는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부터 최 씨의 딸 정유라의 친구 부모 사업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를 비롯한 친박 의원들이 국민을 상대로 대통령 ‘퇴

호위 무사

진 불가’를 주장하려면, 이 대목에서 국정농단의 책임을 뒤집어쓸 호위무사 하나를 내세워야 되지 않을까. 최순실을 봐도, 문고리 3인방을 봐도 모두가 국정농단의 책임을 대통령에게 전가하는 모양새다. 묵숨까지는 아니더라도 최 소 “대통령 몰래 국정 농단을 해 왔다. 최순실 씨를 알고 있었다. 대통령은 상관없다”는 정도로 책임을 대신 지거나 희생양이 되겠다고 나서는 인물은 찾아보기 어렵다. 입으로만 ‘퇴진 불사’를 외칠 뿐, 아무리 봐도 새누리당에는 자신을 희생해서 대통령을 살리려는 호위무사가 없는 것 같다.

그러나 신숭겸이 여러 차례 간청하고 상황이 급박해지자 옷을 바꿔 입는다. 왕의 투구와 갑옷을 입은 신숭겸은 다른 장수들과 함께 적을 유인해 전투를 벌인다. 왕건은 그사이 탈출에 성공한다. 이 전투에서 1만 명의 고려군이 전멸하고, 신숭겸을 비롯한 장수들도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程厚植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일간) 우편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63 (FAX 222-4938)	경영지원국 (FAX 222-800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0195)
편 집 부 220-0649	문 화 부 220-0661 (FAX 227-9500)	기획관리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AX 222-0195)
정 치 부 220-0632	문화미디어부 220-0664	사 회 부 220-0642	체 육 부 220-0697
사 회 부 220-0642	체 육 부 220-0697	사 회 부 220-0652	사 진 부 220-0693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세요.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54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